

금융당국 개편안 후폭풍

9000개 이상 법조문 수정 필요… 금융정책 차질 불가피

여야 대립 여전… 법안 처리 불투명
패스트트랙 지정시 최장 330일 소요
근무지 문제 등 인재 이탈 가능성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감독기가 대수술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직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편입되면서 근무지가 세종시로 바뀌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돼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조직개편안 발표에 앞서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본회의에 오른다. 금융당국 개편안은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한다. 금융감독 기능만 남겨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그 아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둔다. 두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제는 이 같은 개편안을 밀어 붙일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뉴스

경우 직원들의 반발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위의 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로 편입되면 대다수 직원은 세종으로 옮겨가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기재부와 공정위 등 여러 부처들 사이에서도 근무지가 '서울 청사'라는 이유로 높은 인기를 유지했다. 서울 청사라는 이점이 사라지면서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의 한 사무관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30~40대 초반 직원들

은 현실적으로 (세종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책적 효율성과 책임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정책과 감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견 시행령 상황이니 재정부책임, 이견 감독규정이니 금감위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는 모습이다.

금감위 아래 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바젤위원회는 금융안정성을 감독하는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차례 국내 금융 시스템 안정성 평가항목을 진행했다. 당시 IMF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두 당국간 의사결정 책임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2019년 평가에서도 독립성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금감원 노조는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조직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기로 했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 수석 부위원장(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면 파업하지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내규상 회의 구성과 안전제안 등에 일주일 가량 걸리는 만큼 다음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선 9000개 이상의 법조문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더 섀 특검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질 경우 금감위 신설 시점이 내년 1월이 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재정경제부 역시 '반쪽 출범'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금감위 설치법이 정부위에서 막힐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을 통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된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민주당(166명) 외에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범여권 의석수를 합치면 이를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거치면 상임위원회 심의부터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는 돼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감독기구 해체 수준 조치”… 금감원 노조, 파업 논의 나선다

내부 반발 거세… 소통부족 등 지적
“감독 기능 분리는 총돌·공백 초래”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금감원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감독기구를 사실상 양분하고 정책 종속성을 구조화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직원들은 “감독기구 해체” 수준의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로비에서는 직원 600~700여 명이 검은 복장을 갖춰 입고 '상복 시위'를 벌였다. 사전 참석을 밝힌 인원은 499명이었지만, 현장에는 시간이 흐르며 인파가 더 몰렸다. 금감원 노조는 “감독 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스

능 분리는 총돌과 공백만 초래할 것”이라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이건 단지 노동조건 문제를 떠나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 선임 직

원은 “우리에게 불리해서가 아니라, 금융산업과 소비자 보호,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방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은 내부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한 조사업역은 “전날 이찬진 원장

의 전체 메일을 보고 한숨만 나왔다”며 “외부 금융사 CEO들은 만나면서 정작 내부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로비 시위 현장을 지나 사무실로 들어갔지만,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날(8일) 오후 4시 30분 열린 긴급 직원 간담회(설명회)에서도 격양된 분위기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금감원 강당은 400여 석이 가득 찼 정도로 붐볐고, 일부 직원들은 간담회 내내 탄식을 쏟아냈다. 이세훈 수석부위원장은 “이미 행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며 “세부 논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에 집중하자”고 진화에 나섰지만, 직원 반응은 싸늘했다.

직원들은 공공기관 재지정이 가져올

후폭풍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금소원 분리로 인해 고용 재배치가 불가피해지면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의 '엑소더스'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한 3년차 직원은 “금감원을 보고 입사했는데 금소원으로 발령 나면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직 분위기가 자체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탐장급 직원은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워낙 조직개편이 큰 이슈다보니 젊은 조사업역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지 집중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노조는 단체행동수위를 조정 중이며, 향후 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 여부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정보섭 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현재는 긴급 상황에 대응한 로비 집회”라며 “총파업 여부는 절차에 따라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경제 8단체 “‘배임죄·자사주 제도·경제형벌’ 입법 보완 필요”

민주당 간담회… 기업부담 완화 촉구

경제 8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또 여러 가지 보완 입법,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상법 개정은 법무부 주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 중심으로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이 한꺼번에 개정돼 해석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구체적으로 ▲배임죄 ▲자사주 제도 ▲경제 형벌 세 가지 분야에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상법상 특수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기준이 20년 넘게 손질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자사주 제도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화 시스템과 기존 보유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예외와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기업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경제 형벌과 관련해서도 법률과 형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공정거래법 등 대기업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며 이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정들을 재검토해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일본 '이토 보고서'를 사례로 들며 장기적 제도 개편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10여 년에 걸쳐 제도를 정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도 단계적·지속적 개혁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지목돼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를 거론하며 책임 있는 이사회 전환, 자사주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제 도입 등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과도하거나 중복된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며 “이는 민생 안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배임죄는 법무부가 경영판단 원칙과 행위 유형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자사주 제도는 9~10월 의견 수렴 후 11월부터 구체적 논의에 착수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 형벌 정비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wkh@